

尹 “국회의원들 끌어내라 지시한 적 없다” 주장 되풀이

현재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 출석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현재)에 출석해 탄핵소추안 징정에 대해 직접 변론하면서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고 지시한 바 없다는 등 기존 주장을 되풀이 했다. 국회 측은 국방위원회 회의록 등의 서류 증거와 계엄 당시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한 계엄군 침입 영상 등을 제시하면서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현재 대심판정에서 이날 열린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이 1시간 40여분만에 끝났다.

재판장인 문형배 현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 본인께서 소추 사유에 대한 의견 진술을 희망하신다면 발언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말하자 윤 대통령은 곧바로 손을 들었다.

윤 대통령은 “뭐라 말씀드릴지 모르겠지만 양해 해주시면 (발언을 하겠다)”고 말했다. 문 권한대행이 허락하자, 윤 대통령은 1분여 발언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처음 출석을 했기 때문에 간단한 말씀 드리겠다”면서 “저는 철 들고 난 이후 지금까지 공직 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러가지 헌법 소송으로 업무가 과중하신 데 제 탄핵 사건으로 고생하시게 돼 재판관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면서 “헌법재판소도 헌법 수호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 만큼 재판관님들께서 여러모로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 측은 ‘야당의 탄핵소추권 남발로 인한 국정마비와 무분별한 예산안 삭감, 하이브리드 전정 위험, 부정선거 의혹’ 등 계엄 선포 이유를 설명했다. ‘야당의 망국적 행위를 알리기 위한 것’이고 계엄군의 국회 투입은 질서유지 차원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 한 것이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인 차기환 변호사는 “소규모이지만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도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국회와 국민들에게 직접 알리고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들과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에 대비해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

국회측 계엄군 침입 영상 제시에 “저항하니까 나오지 않느냐” 강변

키려고 하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당시 결코 법조인을 체포 구금하라고 지시한 바 없고 실제로 체포된 법조인도 전혀 없고 한동훈 전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고 지시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회 측은 현재에 제출한 국방위원회 회의록 등의 서류 증거와 계엄 당시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한 계엄군 침입 영상 등을 제시하면서 윤 대통령 측의 주장에 반박했다. 계엄 관련자들의 증언도 제시했다.

영상을 본 윤 대통령은 “군인들이 청사에 진입했는데 직원들이 좀 저항하니까 스스로 나오지 않느냐.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데”라면서 강변했다.

문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에게 직접 “국가 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느냐”, “이진우 수방사령관, 광종근 특전사령관에게 계엄 선포 후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느냐” 등 두 가지 질문을 했다.

윤 대통령은 쪽지에 대해서 “준 적도 없고, 나중에 계엄을 해제한 후에 한참 있다가 언론을 통해서 알았다”고 부인했고, 끌어내라는 지시에 대해서는 “없습니다”고 답변했다.

현재는 이날 윤 대통령 측이 요청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준섭 경제수석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23일 진행되는 4차 변론 기일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된다. 조지호 전 경찰총장도 이날 증인 신문이 예정되었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다음 달 4일에는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하루 종일 재판이 진행되는 6일 오전에는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 오후에는 광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과 박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열린다. 11일에는 이 전 장관이 증인으로 법정에서 선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야당, 윤대통령 비판

“현재에서 내란 발발 폭도들에게 땀감 주냐” “포고령 ‘폭탄 돌리기’ 조속한 탄핵 인용 필요”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포고령 실행 계획이 없었다고 주장하자 “반헌법적 폭거를 일으키고 반성도 없이 또다시 폭동을 선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윤석열은 포고령 1호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작성한 것이라고 책임회피를 했고,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 체포를 지시한 적도 없으며, 비상입법기구 쪽지를 준 적도 없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윤 대통령을 향해 “서부지법에 이어 이번에는 헌재에 겁박하기 위해 폭도들을 위한 땀감을 제공하려는 건지 답하라”며 “오늘 윤석열의 발언 하나하나가 폭도들의 메아리로 바뀌어 돌아올 것을 생각하면 끔찍하다”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은 윤 대통령을 가리켜 “비겁한 법꾸러지”라며 “현재는 위헌 여부, 수사와 (형사) 재판은 죄를 심판하는 틈을 교묘히 파고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은 스스로 구속 기소 사유, 증거인멸 사유를 또다시 입증했다”며 “조속한 탄핵심판 및 인용, 철저한 수사, 사법부 유죄 판결이 신속히 진행돼야 할 이유를 증명했다”고 밝혔다.

김용현 의원은 “내란의 가장 충직한 부하 김용현은 계엄 해제 이후에도 포고령 위반이라며 (한동훈 전 대표와 이재명 대표를) 고발했다. 효력을 잃은 포고령도 시행하려고 한 것”이라며 “윤석열은 자기가 살기 위해 거짓말만 하고 부하를 사지로 내모는 비열한 변명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윤재관 대변인은 논평에서 “위헌적 조항으로 가득한 포고령의 작성에 대해 비겁한 윤석열과 김용현이 폭탄 돌리기와 같은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누가 포고령을 작성했는지 진실게임은 중요하지 않다. 치졸한 책임 떠넘기기에 탄핵심판과 내란수사가 지연될 이유는 전혀 없다”며 “내란수괴의 대통령직 파면과 구속기소, 법에 의한 단죄에 관용이 개입할 여지는 없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최상목 대행, TV 수신료 통합 징수 등 3개 법안 ‘거부권’

방송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尹 정부 37개 법안 거부권 행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방송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반인권적 국가 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등 3개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정례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과 함께 법률안을 심도 있게 검토했으며, 3개 법률안에 대해 불가피하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 들어 37개의 법안에 거부권이 행사됐고, 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내란·건권희 여사 특검법 등 쌍특검법을 포함해 모두 6건으로 늘었다.

최 대행은 “반인권적 국가 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은 위헌성이 있는 요소들을 국회에서 보완해 달라는 요청”이라며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은 국회와 정부와 함께 더 바람직한 대안과 해결책을 다시 한번 논의해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최 대행은 또 “수신료 분리 징수 제도는 작년 7월부터 시행돼 이미 1500만 가구에서 분리 납부를 하고 있으며 국민의 수신료 과·납입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다시 수신료 결합 징수를 강제하게 된다면 국민의 선택권을 저해하고, 소중한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공영방송이 그 역할을 다할 수 있

도록 재정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민들께서 분리 징수와 통합 징수 중에 선택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 대행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무엇보다 학생들은 인공지능 기술은 물론 앞으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유비쿼터스 등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맞춤형 학습을 할 수 있는 교과서 사용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게 된다”며 “시도 교육청과 학교의 재정 여건에 따라 일부 학생만 다양한 디지털 교육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돼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이라는 헌법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일보 73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사랑과 감사의 70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4]

전체이사장
나학수 목사
(광주거주교회)

법인이사장
김용대 목사
(영광교회)

총장
김경운 박사

For the Lord
주님을 위하여

To the World
세상을 향하여

www.uwayapply.com

인터넷접수

유웨이 어플라이

입학문의

062)605-1114

2025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학 부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열	학 과	수 시	정 시
인문사회	신 학 과	30	5
	한국어교육학과	1	1
	복지상담융합학부	24	5
사법	유아교육과	8	2
예능	음악 학부 (음악학 전공/실용음악학 전공)	21	8
	총 계	84	21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www.kwangshin.ac.kr

www.kwangshin.ac.kr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로330로 36